

4·25 재보궐 선거 한달 앞

의미와 전망

한나라-非한나라 첫대결

대선가도 전초전... 무안·신안 열린우리-민주당 공조 주목

국회의원 선거 3곳을 비롯 모두 38개 선거구에서 치러지는 4·25 재보궐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정치권은 이번 국회의원 보궐선거 결과가 연말 대선에 전망할 수 있는 시금석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단 한나라당은 열세 지역인 무안·신안을 제외하고 대전 서구을과 경기 화성 등 2곳에서 승리함으로써 대선 가도의 우세한 대세를 이어 나간다는 목표다.

반면 분열된 범여권은 어떻게든 반(反)한나라당 연합전선을 구축, 대선을 앞두고 정계개편의 동력 등 대통합의 단초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재보선의 최대 격전지는 한나라당이 재선 전 의원과 국민중심당 심대평 공동대표가 각축전을 펼치고 있는 대전 서구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과 탈당그룹, 민주당은 이 지역에 마땅한 후보감을 찾지 못한 채 심 후보를 추천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심 후보는 선거연합이나 연합공천을 거부하고 있지만 선거구도상 한나라당 대 비(非)한나라당 세력의 대리전 양상을 띠 전망이다.

경기 화성은 각 당이 후보공천을 늦추고 있는 가운데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맞대결이 펼쳐질 전망이다. 공천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은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을 경우 무안·신안과 경기 화성에선 사실상 열린우리-민주당 공조체제가 이뤄질 전망이다.

무안·신안은 민주당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홍업 전 아태재단 부이사장을 전략공천한 가운데 한나라당은 강성만 전 농림부장관 정책보좌관을 공천했고, 열린우리당은 후보를 내지 않는 쪽으로 가도를 잡았다.

그러나 김 전 부이사장의 출마와 민주당의 전략공천에 대한 반발이 심화되고 있어 당초 민주당에 공천을 신청했던 이재현 전 무안군수와 농민운동가 출신 김호산씨가 무소속으로 출마할 경우 난타전이 예상된다. 이 전 군수와 김씨는 지난 23일 "당적을 보유하지 않은 김홍업씨를 공천한 것은 당헌·당규상 원인 무효"라며 민주당에 공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범여권은 비록 격식을 갖춘 연합공천은 성사시키지 못했지만, 대전의 심대평 후보와 무안·신안의 김홍업 후보가 당선될 경우 정치적으로 '비 한나라당 연합세력'의 승리라고 자평하면서 대선 판도의 반전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대선 화성에서 의외의 성과를 거둘 경우 범여권으로서 '정치적 대박'을 터뜨리게 되면서 통합 논의는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화성과 대전에서 모두 승리를 거두면 대선판도에서 한나라당은 대세를 굳히게 되는 반면 범여권은 통합신당 추진의 명분과 현실적 동력을 상당부분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열린우리당은 또 한 차례 탈당이 이어지면서 당 해체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한편으로 4·25 재보선은 대선 예비주자들이 지원유세를 통해 자신의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영향력을 확대시킬 수 있는 기회라는 의미도 있다. 따라서 오는 8월 대선후보 경선을 치르는 한나라당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는 재보선 유세전에 뛰어들어 당내 지지세력 확대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범여권 예비주자들은 연합공천이 구체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경기도 화성을 제외하고는 적극적인 지원유세에 나서기 어려워 언론을 통한 우회 지원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정부가 올해 북한에 보낼 비료 가운데 첫 선적분이 25일 여수 낙포두에서 실려지고 있다. 베트남 선적인 '롱 비엔(LONG BIEN)'호는 남해화학에서 생산된 복합비료 6천500t을 싣고 오는 27일 북한 남포항으로 출항할 예정이다. 이는 올해 정부가 북한에 보내기로 한 비료 30만 t 가운데 첫 항차분이다. /여수=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현장과 시각

DJ가 결단 내려야



정후식 정치부 차장

4·25 재·보궐선거를 한 달 앞두고 광주·전남 민심이 들끓고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DJ)의 차남 김홍업씨의 무안·신안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와 민주당의 전략공천 때문이다.

지난 23일 광주YMCA와 5·18기념재단 등 광주·전남지역 57개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광주YMCA 무진관에 모여 "막대기만 꽂아도 당선된다"는 과거의 오만과 불손을 고개 숙이고자 하는 구태정치를 과감히 거부한다"고 선언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일부 단체 대표들은 '김씨가 DJ의 후광을 업고 출마하려는 것은 몰염치한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단체들은 김씨의 출마일이 나돌던 지난 8일 비리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은 그가 정치상황을 이용해 출마하는 것은 '호남인을 무시하고 자존심을 짓밟는 처사'라며 선거에 나설 경우 낙선운동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경고음은 철저히 무시됐다.

김씨는 15일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고 민주당은 한 발 더 나아가 4명의 공천 신청자를 배제한 재당원도 아닌 그를 전략공천했다. 원칙도 명분도 없는 선택이었다. 당직자들의 지원사격은 더욱 거셌다. '미국에서 5대, 10대 대물림도 한다' DJ와 민주당을 합연 공천이라며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후 반대 성명서 발표와 기자회견, 삭발과 점거 능성이 이어졌다. 반발의 강도는 심상치 않다. '광주 시민선언'으로 광주 동구에 이문호 전 감사관을 시민후보로 내세운 14대 총선이나 탄핵여론이 몰아쳤던 17대 총선을 떠올리게 한다. 지난 30여년 동안 DJ와 민주당 일이라면 앞뒤 가리지 않고 박수를 보내왔던 열혈 지지자들조차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김씨는 물러서지 않고 있다. "DJ의 아들로서가 아닌 국민의 심부름꾼으로서 민주평화세력 통합에 앞장서겠다"며 유권자의 심판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어쩌면 김씨는 이권정착과 중여세 포탈로 처벌 받은 전력이 억울한 부분이 있다며 '명예회복'을 노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를 포함한 '홍삼 트리오'의 부정과 비리로 인해 DJ는 레임덕을 겪어야 했고 업적을 제대로 평가받지도 못했다. 'DJ를 자유롭게 해주자'며 부담을 주지 않으려 했던 호남인들의 가슴에 땅이 들게 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더욱이 무안·신안지역은 아버지의 고향이라는 것 외에 개인적 연고도 없는 지역이다.

이제 김씨와 민주당, DJ가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다. 김씨의 출마는 시민단체의 지적처럼 DJ를 지지해온 유권자들에게 부담을 주고 '정치적 선택'을 강요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이를 거부한다면 유권자들이 심판에 나설 수밖에 없지 않은가.

/who@kwangju.co.kr

재정지원 감축·정원 축소 등 엄단

3불정책 위반대학 교육부 제재수단은 학과 폐지·모집 정지도 병행

교육부는 국민의 학습권 보장과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기어입학제와 고교등급제, 본교시 유지를 확대하는 이른바 '3불정책'을 반드시 유지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위반 대학은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의 단호한 의지는 서울대 장기발 전 계획위원이자 정부의 3불 정책을 '일초 같은 존재'로 비유한 지 하루 만에 사립대 총장들이 3불정책 폐지를 요구한 이달 22일 김광조 교육부 차관보에 의해 표면화됐다. 당시 김 차관보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

어 3불정책을 위반하는 대학에는 법령이 허용하는 모든 제재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공개 경고했던 것.

교육부에서 공개되는 제재수단은 재정 지원 감축과 정원 동결, 정원 감축, 학과 폐지, 학생 모집 정지 등이다.

이중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는 수단은 재정 제재다. 실제로 2005학년도 수시 1학기 모집에서 고교등급제 금지 규정을 어기고 고교간 학력차를 입학전형에 반영한 고려대와 연세대, 이화여대에 대해 약 10억원씩 재정 지원을 줄인 전례가 있다.

교육부는 재정 제재가 '급브레이크'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정원 동결 및 감축 수단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가천의대와 한서대, 서경대, 안양대 등이 입학정원을 늘리면서 높아야 할 수익을 기본재산 확보를 맞추지 못해 2005년 정원감축 제재를 받고도 관동대도 대대 설립 부대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입학정원 50명 감축 및 재정평가시 5% 감점 처분을 받았다.

재정지원 감축과 정원 감축 조치가 불구하고 3불정책을 계속 위반한다면 '극약 처방'으로 비유되는 학과 폐지나 학생 모집 정지 수단을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 일각에서는 위반 대학을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으나 관련 법률의 미비로 사법처리가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연합뉴스

지방의회 활동 평가한다

'성과공표제' 도입...의원 겸직금지 범위·영리행위 제한 강화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이 평가되고,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범위 및 영리행위 제한이 강화된다.

올해 안으로 지방의회별 의정활동 실적을 주민들에게 공시하는 '의정성과공표제'가 도입된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지방의원 겸직 금지와 영리제한 범위 확대에 이어 '의정성과공표제' 도입 등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 재정립을 위한 종합계획을 올해 상반기 안에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방의원 유급제 시행에 따라 지방의회의 권한을 견제함과 동시에 역할을 높이기 위해서다. '의정성과공표제'는 지방의회별 의정활동 실적을 주민들에게 공시해 알리는 제도다.

행정부는 지방의원의 권한남용을 막기 위한 겸직 금지 범위와 지방의원의 영리행위 제한 범위를 넓힐 방침이다.

또 지방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Large advertisement for '하나투어' (Hana Tour) featuring travel packages to Jeju Island, China, and Japan. It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1588-1134), various tour options with prices, and promotional messages like '고객님께 받은 사랑, 감동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The love and感动 you received from our customers, we will repay with gratitude).